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4.3.28.(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8인(강건기, 박화선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3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당의 공천 과정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주요 보도 내용입니다. 정당 지도자와 후보자에게는 중요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각 당의 구체적인 총선 공약이나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공천이 되고 누가 낙천되는지 못지않게 시청자에게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책 이슈가 실종된 것은 각 정당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우리 언론은 총선 보도에서 공천 위주의 보도 관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진투구식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각 정당의 구체적 정책과 입장을 비교 정리해 이를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각자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각자 생각의 거리는 멀고 차이는 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현상 위주 보도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이를 둘러싼 철학적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다른 OECD 선진국 사례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보다 식견있는 지식(informed knowledge)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공론장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해법이 모색되고 이해와 공감의 토대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총선이나 대선, 지역선거 마찬가지로 정책 위주 경쟁이 되도록 언론이 유도해야 되는 것이 사실 사명인데요. 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공천 과정, 누가 공천을 받고 누가 떨어졌는지 그와 관련된 어떤 정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 시청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그런 공천 파동을 중심으로 흐름이 전개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정책 위주로 보도를 끌고 간다,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뉴스란 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도해야 되는데 흘러가는 상황을 도외시한 채 당위성 있는 보도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함께 변해야지, 정책 경쟁 위주의 선거 보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앞의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 것이지만,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을 잘 내놓지 않습니다. 정당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서기 전에 정책 다운 정책을 내놓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총선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나온 것은 이번 주 들어서

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서니까 이제서야 정책들을 발표하고 세종시 국회이전도 나오고 이런 거죠. 아무튼 뒤늦게 정책을 내놨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평가하고 또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부각시키고 해서 정책 위주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 저는 진행자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나운서와 앵커들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라고 하는 분들은 프로그램에 맞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봤을 때 저분은 대본을 숙지하고 방송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월 2일 뉴스오늘 3부, 토요 와이드의 조서연 앵커가 뉴스 진행할 때 발음이 약간 버벅거리고 말 속도가 빨라서 시청자 입장에서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3월 4일 7시 뉴스 여성 아나운서가 "정부에서 전공의들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한다고 엄포를 하였습니다." 이게 적절한 용어 사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엄포는 사전적으로 실속 없는 말로 남을 위협하거나 호령하는 짓' 으로 매우 부정적인 말에 표현되는데 실속의 여부가 결과물을 의미하는 데 진행자가 판단하여 부정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여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3월 12일 뉴스포커스 성유미 아나운서 패널 발언에서 '요런'이란 단어를 쓰던데 '요런'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낮추어 사용하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이런'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 확인 결과 '이런', '요런'은 허용은 되지만 정확한 어휘 사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아나운서들 발음 버벅거리고 속도 빠르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원래 잘 하는 분인데 당일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시청자들에게 불편하게 보였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 '엄포'라는 용어 사용은 단신 기사를 기자가 이렇게 써서 아나운서가 그대로 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엄포라는 말을 그냥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꼭 못 쓸 용어는 아니에요. 다만, 뉘앙스 자체가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 했다', '경고 조치했다', 이렇게 하면 뉘앙스에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 제가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 성유미 아나운서가 '요런'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상으로는 쓸 수 있는 있는 말이지만 뉘앙스의 문제죠. 약간 익살스러운 느낌이 들고 낮잡아 지칭하는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허인순 위원

- 3월11일 [출근길 인터뷰] 건강하려면 운동 필수!..."건강코치와 함께해요", 강남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의 생활 속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해 운영하면 좋을 듯합니다. 보건소 직원이 구내 경로당을 찾아가 기구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도 소개시켜 준다고 합니다. 수동적이고 구색 갖추기식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적극적 행정을 보도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 3월17일 불법 홀덤펍 업주 구속수사 원칙...내일부터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개월간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라는 내용의 보도였는데 홀덤펍 용어가 생소해 뭐지 하는 의구심이 있었고 진행하는 앵커우먼이 목이 메는지, 사례가 걸렸는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출근길 인터뷰'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례 발굴, 보도하겠습니다.
- 사실 홀덤펍은 저도 구세대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만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지적을 하실 때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리포트나 단신 내용이 짧아서 포함시키기 어렵다, 이전에 여러번 반복해서 다 아는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방송은 누구나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대를 정해놓고 시청자 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짧게라도 한 줄 새로운 용어는 의미를 붙여 주도록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나운서들의 문제는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운서들이 좀 더 프로 의식을 갖고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만 이런 실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신석 위원

- 연합뉴스TV의 [토요와이드] 사회뉴스 3월 16일 "역대 최고 사교육비...잡는다고 하는데 이번 늘봄 학교는" 제목으로 안채린 기자가 방송보도 내용은 늘봄 학교 도입 근본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는 보도로 판단된다. 늘봄 학교 도입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본 방송에서 사교육을 잡기 위해 늘봄 학교가 시행되는 것처럼 느끼게 방송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2024년 3월14일 통계청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 약 27.1조 원으로 초등학교 12조 4,000억 원으로 45%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전체 학생수 86%를 차지하고 있어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며 사교육 참여율 또한 맞벌이 가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청 발표에 사교육의 심각성을 보도하기 위해 방송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늘봄 학교를 통해 사교육을 잡는다는 형태로 보도 편성이 된 것 같다. 보도 내용을 보면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킬러 문항 배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모양새",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 학교를 통해 초등생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 보겠다는 각오" 등으로 보도 내용을 보면, 늘봄 학교로 역대 최고 사교육비 잡는다고 귀결된다. 정부 정책의 늘봄 학교 도입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방송 내용은 사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부의 킬러 문항 배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대책을 다루고, 의대 정원 문제와 의대 열풍, 전문가도 아닌 전교조 대변인을 내세워 의대 정원 문제와 입시 정책 비판, 저출생 원인과 사교육비 연계 등 전체적인 방송의 맥락이 일괄성이 없고, 정부 정책을 비판

하고자 방송 보도한 것인지, 사교육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방송보도를 한 것인지 주제가 명확하지 않고 짜깁기하여 보도한 느낌이다. 안채린 기자가 좀 더 늘봄 학교의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보도 방송을 준비했다라면 시청자들이 늘봄 학교의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보도하고 사교육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방송을 했다면 더 좋은 방송편성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연합뉴스TV가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이슈 되고, 정책을 비판 보도를하고자 할 때는 담당기자가 관련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방송보도를 한다면 시청자들이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연합뉴스TV를 시청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이 문제는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보도 기자는 젊고 경험이 짧은 기자이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육부로부터 사교육과 저출산 문제를 연결시키는 설명을 들었다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 위원님은 교육 분야에 워낙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고 종사하셨기 때문에 저나 해당 기자보다는 훨씬 더 사안을 바라보시는 통찰력이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전문가로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 내용이 대체로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이 리포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라고 시청자가 느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해당 기자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얘기하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서면제출)

3월 9일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에서 극한 대치로 치닫는 의대 증원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잘 보도하였음. 특히, 의대 적정 규모를 둘러싼 논란과 버랑 끝 몰린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상황, 해외(독일)의 공공 의료 상황 및 의사 증원 해결 사례, 독일의 파업방식 등을 탐사하고 보도한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측 입장을 보도할 때 우리나라 의대의 소규모 정원 양성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언급하고, 의사들이 제기하는 증원 문제점만을 단순히 언급하기보다는 심층 취재를 통해 의사를 2,000명 증원해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지, 의사들의 지역 쏠림 현상이 실질적으로 발생할지, 특정 의료분야로 의사들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지를 분석하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동 탐사보도에서 좋았던 점은 해외사례로 독일의 지역 의사제를 소개하고, 독일은 중앙정부와 의사단체도 의사 증원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대 입학정원을 5천 명이나 증원했다고 강조, 다만 이행은 지방정부 소관이라 실행은 좀 더딘 면이 있다고 언급, 증원 이유는 젊은 의사들이 일과 가정의 병립에 초점을 맞추는 데 집중하기 때문. 독일의 지방정부가 의사증원에 주저하는 이유는 재정 부담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형병원이 전공의 의존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이 이번 파업을 통해 드러났다고 언급하고 이는 의료현장의 기형적 인력구조로 Big 5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아 의료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좋았습니다. 따라서 대형병원은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보도에서 지적하고, 상급병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강조한 것은 적절한 보도였습니다. 끝으로 독일의 의료 및 지하철 파업을 사례로 들면서 파국 없이 타협안을 찾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좋은 마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 손영준 위원장

우리 강건기 위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서면 제출로 알아보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의대 정원 문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건기 위원님은 칭찬해 주시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현상만 따라다니며 보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시청자들은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게 됩니다. 언론매체로서는 이슈에 대해 방향을 잡아 보도하려면 취재와 분석 노력을 단순한 현상 보도에 비해 몇배는 더 들여야 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만만치는 않은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현상 나열보다는 분석과 규명을 추구하는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현장의재구성]인간영역 대체하는 AI의 진화...그 명과 암, 현장의 재구성에 대해 여러 차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만, 매번 이 섹션이 다룰 수 있는 주제와 구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내용 역시 다른 보도와 큰 차별성이 없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해당 보도의 경우 '인간영역을 대체하는 AI의 진화... 그 명과 암'이라는 제목부터 눈길을 끄니다. 최근 딥페이크, 자율주행, 로봇 등 AI기술 활용 분야가 큰 관심을 받고 있어 과연 어떤 재구성을 하였는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뉴스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아나운서가 제주도의 주요 정책을 전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AI 캐스터를 선보였다는 최근 이슈로 시작합니다. 이어 AI 로봇이 인터뷰 도중 취재 기자를 성추행을 하는 장면을 지적하고, 가짜 영상과 목소리를 모방한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AI 기술 세계 1위 엔비디아의 CEO가 "5년 내 AI가 인간의 모든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AI를 대하는 진짜 인간의 자세는..."라는 물음으로 보도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위 보도에서는 제목과는 달리 AI가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AI 기술 기반의 아나운서와 기상 캐스터의 경우 인간의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시각으로 해석하면 오히려'명'보다는 '암'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연합뉴스TV에서 3월 보도된 다른 기사들만 살펴봐도, 산업분야(알아서 화질 높이고 소리까지 조절...TV도 AI 시대 농축산업에 AI 적용...스마트 온실·축사 확대, 맛있는 삼겹살 고르기...AI 기술에 투명 포장까지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서도(산책로로서 만나는 로봇 도서관...자율주행 기술 활용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AI 커버곡과 함께 뜬 '밤양갱'...저작권 문제 재점화, 문화계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함께 저작권 문제 역시 AI 기술이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소개했으면 신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해 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의 재구성'이라는 포맷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콘텐츠를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보다는 흥미 또는 다양한 뉴스 방식을 추구

하면서 만든 포맷이기 때문에 일반 리포트나 단신처럼 그렇게 다양하고 분석적인 콘텐츠를 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일반 뉴스에는 잘 안 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들을 활용하고, 딱딱한 뉴스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형식의 보도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화선 위원(서면제출)

- [뉴스프리즘] 아이 낳으면 1억 원 주는 회사.....대부분엔 '언감생심' - 3월 16일, 우리나라의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졌으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출생률을 높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혼란은 예정된 미래이지만 쉽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는 화재성이 높은 부영그룹의 출산지원책을 보도하고 다른 기업 및 지자체의 출산지원책들을 소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기획 기사는 시의적절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출산지원책을 보도하면서 네쌍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얘기나 부영그룹 등 마치 로또복권에 당첨된 듯한 사례와 출산 및 보육수당에 부과세 금액이 연 68만 원수준을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극단적인 지원에 대한 양극화 사례를 지적합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지원금에 규모에 따라 출산율이 다소 올라가나 인근지역은 감소하는 풍선효과의 사례도 언급하면서 출산은 한 기업 및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 정부 및 범국민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출생률이 높아진 해외 선진국의 출산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방법적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할 때 국가지대사인 출산율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설익은 정책으로 예산만 많이 쓰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는데 후속 보도 등을 통해서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반드시 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려서 인구 유지가 어렵다면 인구감소 및 노령화 시대에 같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한 같이 제시함으로써 예정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극복할수 있는 사회적 과제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서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 3.18, "오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에서도 기후 동행 카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라는 멘트로 시작해서 기후 동행 카드를 서울-김포를 오가는 시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기후동행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시청자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동행 카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화면상 인포그래픽이나 앵커의 설명 멘트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면 기사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에서도 월 6만 원대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를 쓸수 있게 된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 손영준 위원장

박화선 위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서면 제출로 알아보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출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뤄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죠. 안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의 동력

을 제대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인구가 줄어든 상태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자, 저는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줄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저출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결국은 이민 정책 같은 것도 많이 논의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민청도 만든다, 이민 문제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민 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어떻게든 출산율을 좀 높여서 안보와 경제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솔직히 기후동행카드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월 6만2천 원에 30일간 대중교통이나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라고 합니다. 리포트.단신을 작성하거나 그래픽을 만들 때 그동안 여러번 뜻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알 것 같아서 생략했다, 분량이 짧아서 넣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한 줄이라도 설명을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 안성희 위원

- [현장의재구성] 인간 영역 대체하는 AI의 진화...그 명과 암 3.18. '현장의 재구성'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AI 아나운서(J-NA)와 한국도로공사의 AI 캐스터(얼굴 변형)를 각각의 특징을 살려 소개해 주어 AI 기술이 생활 속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범죄연루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례도 제시하고 있어 의미 있었으나, 다만 '이상한 케이스'로 중간에 소개된 세계 최초 AI 성추행 논란 사례는 실제 AI 성추행 케이스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일종의 가십거리에 해당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맥락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례를 삭제하거나 '헤프닝'이 있었다는 내용의 자막을 추가하는 것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 [노사연합] "무단퇴사 직원들 때문에 중국집 매출급감...3,500만원 배상" 현실은? (3/6) '노사연합'은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로만 소개되고 있는 코너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이슈들을 관련 전문가들이 '노측'과 '사측'의 입장에서 무겁지 않게 다루고 있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①실제 사안에서는 130만원이라는 비교적 소액 배상만 인정되었음에도 해당 영상 제목에 '3,500만원 배상'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3,500만원 배상'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②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연 설명 없이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써서 제출하면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현장의 재구성' 이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처럼 실제 성추행 케이스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한' 사례라고 얘기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주의하라고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 '노사연합' 이 부분도 중국집 사장님 주장 3,500만원 배상 이게 따옴표로 돼 있고 그 뒤에 현실은 하고서 이제 물음표가 돼 있습니다.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뒤에 현실은 하고 물음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앞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3,500만원 물어내!" 이런 식으로 처리해 배상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도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이상헌 위원

- 지난 3월 15일,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부터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지원금 정책 변경에 대한 배경과 취지, 실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의 시각에서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단순 팩트를 전달과는 달리 쉽게 풀어 설명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3월 19일자, '연예인 열애에 광고 기업까지 불똥...형평성 논란도'...기업까지 불똥이라는 제목과 달리 해당 연예인이 광고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이었고, 형평성 논란도 남성보다 여성 연예인이 더 공격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기사 제목으로 예상하는 내용과는 다소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뉴스 제목과 보도 내용이 좀 더 일치감 있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김대호 박사님은 본인이 워낙 경제 이야기를 쉽게 잘 풀어나가셔서 호평이 많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예인 문제는 제목이 약간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광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모델이 계속 가치가 있으면 사실 광고모델 재계약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시켰다고도 볼 수 있고 환승연애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댓글창도 닫고 그랬다고 볼 수 있으니까 '불똥'이란 표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 이 부분은 저도 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누구하고 형평성인지 연예인과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인지, 남녀의 형평성 문제라고까지 생각이 미치기엔 제목이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기자의 뜻은 여성 연예인이 상대적으로 남성 연예인보다 이런 스캔들 때 광고에 취약하다 이런 뜻이었다고 하면 남녀 간의 형평성 문제였겠죠. 데스크 과정에서도 적절하게 수정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이성우 위원

- '전체 종사자 중 1%...버스 모는 여성 기사들(3.8.)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날 기업 캠페인이나 행사, 단체의 집회 등 여러 소재의 뉴스를 보도한 와중에 연합뉴스TV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은 직업군을 다루었습니다. 전체 종사자의 1%가 여성인 직업이 버스 기사임을 소개하면서 7년째 서울에서 시내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워킹맘의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 버스 기사에 대한 승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 버스 기사의 비율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전체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과 버스회사에서 여성 기사를 아예 채용하지 않거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회원국 중 29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이 일하는 여성에게 가장 가혹한 환경을 가진 나라요, 12년 연속 꼴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때였다 보니 연합뉴스TV 이번 보도는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서울 시내에 250여 명이 넘는 여성 버스 기사들이 시민들의 발을 대신하고 있다는 클로징 멘트를 통해 직군에 상관없이 일하는 여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해 여타 뉴스와는 색다르고 개성 있는 기사였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이날 '세계 여성의날 양대 노총 집회...여성 노동자 환경 개선 촉구'라는 단신도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뉴스는 양대 노총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클로징 멘트로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밝히고 새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차별을 가속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로 마무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양대 노총을 드러낸 만큼, 그들의 공통된 주장을 보다 상세히 전하거나 기왕 민주노총의 특별한 입장을 소개했다면, 한국노총이 갖고 있는 입장도 함께 소개해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 3월 12일 뉴스센터12(오후 12시 11분경)에 현직 교사 8명이 사교육업체로부터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넘기고 6억 6천만 원을 받다가 적발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자막 뉴스에 "교사 8명, 문항 공급 조직...학원에 6억 6천 억 받아"로 오타를 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 채널인 만큼 시청자들의 기대와 신뢰가 남다릅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막 뉴스의 오타를 여러 번 지적하셨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세계 여성의 날 집회 기사 지적해 주신 부분은 양대 노총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신이어서 분량이 짧다 보니까 양대노총의 공통적인 부분 주장 써주고,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이 사표 처리 이후에 첫 여성의 날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한 줄을 붙여준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노총 입장을 쓴 것입니다. 해당 부서의 그런 입장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좀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공통적인 주장을 한 부분 중에 하나는 때서 한국노총 주장으로 써주고 민주노총 주장을 그다음에 써주면 되는 문제인데 처리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 자막 문제는 망신스러운데요. 사실은 자막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저는 차라리 자막 수를 줄였으면 한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자막 때문에 오해 받고 방송사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면 차라리 자막 수를 줄여서 실수도 덜 일어나게 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정치 대담 같은 경우 자막 실수가 상당히 파장이 클 수가 있어서 정치 대담 자막 수는 줄이는 게 좋겠다고 보도국장에게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자막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오디오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시청자에 대한 전달력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겠지만, 오류로 인한 이미지 타격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방침을 설정하는 문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손영준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거나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